

정쟁 속 민생은 한뚝… 여야,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 맞손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
노동 약자 보호 공감대 형성하고
“정기국회 내 조속한 입법”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9일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입법 협력에 나섰다. 여야 정책위원회는 정치적 갈등과 별개로 노동 약자를 위한 안전망 마련에 뜻을 모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조속한 입법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가 함께 만드는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는 지난달 15일 여야 정책위원장의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양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과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정기국회 내 입법 성과를 내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자리다.

먼저 발언을 시작한 권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여야 정책위가 바로 모이는 걸 보니 민생에 있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플랫폼 노동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자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정책과 입법 결실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가 함께 만드는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란다”고 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토론할 첫 현안은 노동”이라며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보상과 안전망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은 특정 누군가를 위한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처럼 기존의 법과 제도가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변화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공백의 고통은 결국 일하는 사람들,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김정호 민주당 의원도 현행 노동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한 입법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노동자라고 불리지도 못하는 노동자가 870만명에 달한다”며 “국회는 이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정말 오래된 숙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각 당의 많은 의원께서 관련 법안을 발의해 주셨다”며 “열린 자세로 토론하고 접점을 찾아 늦어도 올해 안에는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도 신발 끈을 고쳐 매겠다”고 다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여당의

정치적 행보를 비판하면서도 민생 입법에는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탄핵 추진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 추진 등을 언급하며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행보에 대해 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착잡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싸울 땐 싸우더라도 소는 키워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다. 정쟁이 격화된다고 해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민생 정책마저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며 “정책을 책임지는 여야 정책 사령탑이라면 정치적 갈등과 민생 과제는 철저히 분리해서 다루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 약자 보호 법안에 대해서는 “접근 방식이나 세부 사항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지켜내겠다는 입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민생에서만큼은 여야가 하나 돼 플랫폼 노동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어 내자”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제도적 대응이 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플랫폼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입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노동 관련 입법은 방향, 속도,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 우리 국회에서는 과연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가. 굉장히 늦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며 “이번 토론이 어떤 제도적 (변화를) 뒷받침하는 데 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metroseoul.co.kr



metro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靑 “엄중한 행위”

**안보실,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
합참, 추가 발사 대비 감시·경계 강화**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9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하자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북한이 이날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0여발을 발사함에 따라 안보실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안보실은 회의에서 우리의 대응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지난 12일에 이어 약 2주 만에 이뤄진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했다. 또 필요한 사항들을 조치하는 데 있어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현재의 상황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낮 12시30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10여 발을 발사했다. 지난 12일 이후 17일 만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지난 23일 우리 정부가 제정한 남북 군사 회담을 거부하는 차원의 무력 시위라는 분석도 나온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했으며, 한미일은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

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한 이후에 이뤄졌다.

앞서 국방부는 MDL 이남 북한군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이 중상을 입는 등 접경 지역 일대 긴장이 고조되자 지난 23일 김홍철 국방정책실장 명의로 MDL 위치 상 호화환, 군 통신선 복원, 접경지역 우발 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할 남북 군사당국 회담 개최를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현 정부 들어 두 번째 공식 회담 제의였으나 북한은 전혀 호응하지 않고 침묵을 이어 왔다.

/서예진 기자 sy@



이태원 참사 4주기… **李 대통령, 희생자 애도**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기억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폭풍 SNS 올린 **李** “직접소통, 대통령 책무”

청와대 참모진 나서 진의 설명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에만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10건이 넘는 게시물을 올리며 대국민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민감한 현안에도 직접 의견을 표해 논란이 일자, 청와대 참모진도 나서서 진의를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도 이 대통령은 29일 “SNS를 통한 직접 소통은 대통령의 중요한 책무”라며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2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총 13건의 게시물을 올렸다. 전날 게시물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다문화가정 지원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다. 이 대통령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예약 우선순위에서 다문화가정 산모와 국가유공자 산모가 같은 순위를 적용받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공유하며 우대 필요성 등에 대해 깊이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밝혔다. 다만 해당 커뮤니티가 보수 성향의 ‘에펠킨리아’라는 점과 게시물에 담긴 일부 표현 등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농촌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임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문제를 언급했다. 이후 관련 발언이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적 기여를 부정하는 취지로 보도되자 이 대통령은 직접 SNS를 통해 “도움이 안 된다”는 말과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며 해당 언론사에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 같이 민감한 현안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전통적인 민주진보 지지층 등에서 ‘차별적 인식’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이에 청와대 참모진도 적극적으로 설명에 나섰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이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다문화 가정 지원 발언은 기존 규정이 10년 전 기준임을 감안해서,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 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도 이날 추가 공지를 통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서예진 기자

靑 대북 대응 놓고 與 “적절” vs 野 “미흡”

민주 “군사·외교적 조치 충분”
국힘, 북한 도발 대응 수위 질타

여야가 29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북 대응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군사·외교적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응이 미흡한 데다 외교·안보 라인의 엇박자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서한 발송, 유엔군 사령부와의 공동조사, 경고사격 등을 거론하며 정부가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외교·안보 라인의 엇박자 논

란에 대해서는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이후 박근혜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 등을 추진한 사례를 들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DMZ 평화공원 조성과 회담을 제안했고, 통일부도 2000억원 규모의 공원 조성과 연간 160억원의 대북 현금 지급 계획을 세웠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엇박자로 보지 않는다. 통일부는 통일부 역할이 있는 것이고 국방부는 국방부 역할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무력시위로 대응하고, 통일부는 유화적인 조치를 추진하며, 대통령은 이를 조율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역대 정부가 유사한 대처를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D

/박경수 기자